

낙관할 수 없는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노재현 / 중앙일보 논설위원

북한 미사일 발사 1주년

지난 8월 31일은 북한이 대포동1호미사일을 발사한 지 꼭 1년 되는 날이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무려 1,500 km를 날아 일본 동북방 해상에 떨어졌다. 열도 상공을 '통과당한' 일본 정부와 국민의 충격은 TV에서 미사일 궤적 추적 과정과 발사의 의미에 대한 전문가 분석 등을 장시간 생방송 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북한 미사일 충격을 역이용해 군비 확장·대북 정책 강경화에 역이용한다는 시각이 있고, 또 일정 부분 그렇기도 하지만 일본 나름의 절박함도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이다. 마하 10의 속도로 떨어지는 대포동1호 미사일을 공중에서 명중시킬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대포동2호의 경우, 미국 국방정보본부(DIA)는 사정거리가 무려 4,300~6,000 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래스카는 물론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 지역 일부가 사정거리에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영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됨은 물론, 한반도 유사시 미일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도

록 억제한다는 점에서, 이들 3개국으로서는 그냥 방치하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그것이 미사일이든 아니면 북한측 주장대로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한 인공위성이든간에,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체' 재발사 움직임을 극력 경계하고 위협 신호를 반복해 보냈다. 일본으로서는 중국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더해 국교도 없는 적성 국가인 데다 행동마저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발 미사일의 위협까지 뒤집어쓰는 형국이어서, 3개국 가운데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심지어 미사일 발사가 재연되면 對북한 경수로 분담금 지원도 중단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정부 당국자들 입에서 여러 차례 나왔다. 미국은 자국 영토에 대한 위협도 위협이지만, 범지구적인 핵무기 억제 전략의 쌍둥이라 할 수 있는 미사일 확산 방지 노력이 북한으로 인해 좌절되는 상황을 용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올브라이트 美 국무장관이 올해 1월 22일 러시아에 "對탄도미사일(ABM)조약을 수정하자"고 제안한 것도, 북한이나 파키스탄 같은 후발국들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코 앞에 다가왔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군비 경쟁을 자제하자는 취지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나 방어체제를 만들지 말자는 협정 내용이 사실

상 실효가 없어진 것이다.

8월 들어 위기 국면 진정 기미

서해바다 총격전 사태까지 겹쳐 악화일로를 치닫던 북한 미사일 위기는 다행히 8월에 들어서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느낌이다. 8월말 현재까지의 정황을 종합해볼 때, 한반도 4총회담 6차분회담 개최(스위스 제네바)에 때맞춰 8월 3~4일 열린 북미미사일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당근'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물론 미사일 발사 포기의 대가로 우선 경제적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미사일회담 당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사실을 인정한 뒤 "돈을 많이 준다면 수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공언했다. 김부상은 그러나 미사일 실험 발사 자체에 대해서는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누구와도 흥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였고, '인공위성'도 "과학 연구를 위한 것이며 국제법상 허용된 것이므로 부득불 발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미사일 연구 개발, 실험 발사, 배치, 수출 등 미사일에 관련된 여러 단계 가운데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대가만 많이 준다면 포기 또는 보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보다 진전된 북한의 입장은 8월 16일 김용순 북한로동당 비서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평양에서 최초로 생방송을 한 CNN(마이

클 치노이 홍콩지국장)과의 인터뷰에서, "방문객들이 떡을 주면 우리도 떡을 줄 것이고 칼을 들이대면 우리도 칼로 대응할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 계획을 중단하면 미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미사일 발사 문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틀 후인 8월 18일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가 중앙통신을 통해 흘러나왔다. 담화문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적인 위성 활동 분야에서는 주변 나라들을 따라잡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미사일 문제에서는 적대국들이 우리의 우려를 해소시킬 의도를 가지고 정당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부분이 특히 한국과 주변국들의 주목을 받았다. 보름 전인 제네바회담에서 북미간에 알맹이있는 의사 타진·교섭이 있었다는 추측은 이 담화문 발표 다음날 美 국무부 제임스 루빈 대변인이 "북한이 미사일 계획을 전면적으로 포기할 경우 북미 관계를 '정상화' 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신빙성을 더했다. 루빈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반대급부로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외교대표부 설치,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제시했다.

미국 조치는 단계적·상징적일 듯

연락사무소 개설은 이미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기본합의때 서로 동의했으나, 실무

협상에서 미국측 파우치의 판문점 통과에 북한이 난색을 표함으로써 지금껏 미뤄져온 사안이다. 외교대표부 설치의 대사급 외교 관계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북미간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결부시킨다면 당근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 제재 해제 문제는 정치적인 제재 해제와 더불어 북한이 갈망하는 사안이지만, 여러 단계가 있어 역시 미사일 관련 제단계와 상응해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미국으로서는 행정부가 의회의 법적인 동의가 아닌 정치적인 동의 또는 묵인만으로 시행 가능한 조치, 예를 들어 재미교포의 북한 투자를 허용한다든가, 잉여 농산물을 대통령 직권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등의 쉬운 조치부터 약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대미 수출,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 조치 해제 등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경제 효과 자체보다는 북미 관계 개선 조짐이라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더 큰 것들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내 북한 자산은 현재 약 1,400만 달러로 액수는 미미하지만 그나마 내용을 더 뜯어보면 북한이 미국 내에 진 채무가 더 많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대가로 벌어들이는 돈 1년치(1억 5,000만 달러)와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한때 국내 몇몇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미사일 포기 대가로

북한에게 '포괄적인 제재 해제 조치', 즉 일종의 '빅딜'을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무언가 오해나 곡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의회 분위기 등 미국 내 사정이 북한에 국교 정상화를 포함해 한꺼번에 보따리를 안길 상황이 아닌 데다, 북한도 지금 단계에서는 연구 개발 포기까지를 포함해 미사일 주권을 송두리째 내놓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보다 신빙성있는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제네바회담에서 북한에 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요구했고, 북한은 명시적인 대답은 유보했으나 일단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미 관계 개선, 북한의 대미 수출 금지 조치 해제, 미국의 對북한 경제 투자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9월이 중요한 갈림길

8월 들어 미국-북한 축(軸)을 중심으로 한 미사일 줄다리기는 일단 유화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그 중간 성과는 9월 7~11일의 북미고위급회담 개최 합의로 나타났다. 이 고위급회담 개최와 맞물려 9월 11일에는 오클랜드(뉴질랜드)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그 며칠 후에는 문제의 페리보고서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3개국 정상회담은 물론 발표 시점 연기를 거듭해온 페리보고서의 최종 결론도 북미고위급회담

결과에 영향받을 것이 뻔하다. 따라서 9월은 대포동미사일 발사 이후 1년 넘게 지속돼온 북한 미사일 긴장 국면이 어느 방향이든 분수령을 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얼르고 달래 적어도 올해 내에는 미사일을 재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준비를 거의 완료했다지만 10월에 접어들면 기상 악화로 발사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9월이야말로 미사일 긴장이 더하느냐 한풀 꺾이느냐는 중요한 시점인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8월중 북한의 동향에서 엿보이는 몇가지 '외곽 때리기(?)' 사례들이다. 먼저 8월 17일 발표된 민민전(한국 민족민주전선) 방송 내용이다. 북한이 남한 내 친북 단체로 위장하고 있는 민민전은 '미국이 벌이는 북의 미사일 위협 소동의 진상을 폭로하는 공개장'이란 것을 통해, "조·미 협상에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북의 미사일 수출과 개발 중지를 요구하며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연계시켜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끈질기게 주장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은 그동안 한국전쟁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한이 해결할 문제인 만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미사일 문제와 평화협정 체결을 연계하려는 '희망사항'을 흘렸는지, 아니면 미국이 한국 입장보다 미사일 문제 해결을 우선시해 평화

협정과 연계 가능성을 북한에 내비쳤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단순히 평화협정 문제를 다신 한 번 부각시켜보려는 북한의 전술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한국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시할 내용이 아닌가 싶다.

또 하나는 북한이 백남순 외무상 명의의 서한을 유럽 4개국에 보내 "9월 14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54차유엔총회에서 양자간 외무장관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사실이다. 일단은 미사일 갈등을 소재로 한 북미 관계를 주축으로 하면서도 유럽과의 관계도 개선해 국제 사회 전반의 지원 및 이해도를 높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한 두 개 국가가 긍정적인 회신을 북한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북한은 또 8월 10일 일본에 대해 '대일 관계 3원칙'을 천명한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對조선 압살 정책을 포기하고, 과거사에 대해 성근(성실)한 사죄와 철저한 보상을 하며, 일본이 끝내 힘의 대결로 나온다면 우리도 상응한 대응책을 선택하겠다는 내용으로, 저간의 북한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조일 관계의 엄중한 현 사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21세기에 무난히 들어갈 수 없다"는 등 관계 개선을 더욱 강력히 촉구하는 어조가 특징이다. 북한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협상 대상이라 할 남한에 대해서는 '남한 당국의 햇볕 정책은 미국의 평화적 이행 전략의 변종', '화해와 협력의 미명 하에 우리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저들의 자유

민주주의체제에 흡수 통일하려는 모략 책동' (8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 등 상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견지했다.

미국의 수단은 제한적, 앞으로도 낙관 못해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냉전 구도 완화나 지속이냐의 큰 갈림길에 서있다. 9월 북미고위급회담을 전후해 벌어질 미사일 관련 제반 상황들은 그 속의 작은 갈림길이자 이정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년간 유지돼온 북미간제네바협정체제가 순탄하게 이행될 것이냐 여부를 점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에 비유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제네바협정의 큰 틀을 이행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의회의 제동 탓으로 중유 제공 시기를 지연하는 등 약속 이행 면에서는 북한보다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창리 핵의혹 시설이 문제됐지만, 美 대표단의 방북 조사 결과 '미완성 시설'로 1차 판정이 남으로써 문제가 일단락됐다. 경수로 제공 작업도 진척 속도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표명하고는 있지만, 약속 폐기까지 할 작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부터 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기한 북한 미사일 문제는 그래서 자칫하면 제네바협정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현안으로 자리매김된 상태다.

한반도 거주민에게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다 줄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 방법을 일단 배

제하고 나면, 문제는 미국이 9월 7일부터 5일간 북한을 만난 자리에서 미사일 포기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북한 핵 문제를 돈(경수로 제공)으로 해결했듯이, 적어도 북한 미사일 해외 수출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대가를 주기로 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도 가입하지 않은 북한이 스스로 '주권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의 연구 개발·실험·발사·배치까지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 마땅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미사일을 자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도 한반도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보다 큰 사안으로 연결짓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 확실하다. 미사일은 돈으로 사고 파는 실리 측면을 넘어 체제 존립이라는 정치적 측면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더 큰 시각으로 보면 핵·미사일에 관한 세계 전략의 차질은 물론,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고 자국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동북아에 배치한 전력의 안정성이 북한 미사일로 인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마땅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 게 미국의 고민이다. 이 와중에 한국은 어떤 수단들을 고르거나 생산해 어느 시점에서 행사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9월이 닥쳐왔다고 본다. 97